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내년은 독일 통일 3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보다 먼저 이룬 동·서독의 통일 과정은 이미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됐지만 여전히 흥미로운 점이 많다. 냉전 시기 분단된 동·서독 관계는 동독의 국가성 인정 문제로 출발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1949년 서독 지역에 출범한 아데나우 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하여 할슈타인(Halstein) 원칙을 공식화했다. 할슈타인 원칙은 서독 정부가 합법적으로 구성된 유일한 정부로서 동독 정부와 외교적 관계를 맺는 국가와는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소련의 베를린 봉쇄가 연합국에 의해 좌절되고 동·서 베를린을 통해 동독인들의 탈출 러시가 증가하자 소련과 동독은 1961년부터 베를린 장벽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이 서방 세계의 완충으로서 동·서독 분단을 유지토록 하기 위해서는 동독이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

동·서독 통일 과정의 교훈

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서독의 단일 대표성만 인정하였고 동독의 유엔 가입은 1973년까지 좌절되었다.

그러나 니스스의 중국 방문 등 동서 냉전이 데탕트 움직임을 보이자 서독의 브란트 정부는 동독의 존재를 인정하고 긴장 완화와 상호 교류를 골자로 하는 '동방정책'을 추진하였다. 197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1972년 동·서독 기본 조약, 상호대표부 설치 등을 통해 양국 관계는 사실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후 동독은 영국·프랑스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74년에는 미국과도 국교를 수립하였다. 1980년대 다시 냉전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럽 내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회의(CSCE)까지 출범시키는 등 밀월기를 가질 수 있었다.

냉전의 전형적 분단국인 우리도 데탕트에 힘입어 1970년 초부터 남북 대화를 시작하였으나 김일성 수령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북한과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 정부 간의 대결 구조 속에서 냉전의 밀월 효과를 향유할 수 없었다. 이후 우리의 긴장 완화 노력은 유럽보다 무려 20년 늦게 진행되고 만다. 1990년 냉전이 해체되고서야 남북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과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

관계를 동시에 규정한 것이다.

동구권 붕괴와 같은 국가 붕괴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북한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한미의 대응으로 북한은 냉전 해체기에 처절한 생존에 성공하였다. 동·서독이 1970년대부터 시작한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한반도에서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야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10년의 진보, 10년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였고 그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지금의 핵보유국의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다.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동방정책을 내걸었을 때 서독 내 보수 진영의 반대는 극렬했다. 동독 체제의 연장자 독일의 영구적 포기가 반대 진영의 골자였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흐름은 동독 체제를 붕괴시킬 수도 없었고 패전국인 서독이 스스로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오히려 긴장 완화와 공존 정책을 통해 동독뿐 아니라 동구권 전체의 아난 과정을 촉진할 수 있었다. 대결보다는 교류 협력을 통해 분단으로 고통받는 동·서독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통일 이후 독일 내에서는 동방정책과 같은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이 통일에 기

여하였는데 대해 "동방정책이 없었다면 동구권의 개혁이나 동독의 평화 운동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평가였다. 중요한 것은 당시 동독이 보인다 변화이다. 동독은 그토록 원하던 국가성을 인정받으면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자유·인권·개발 등에 있어 국제 사회의 기준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인적 교류를 허용하고 여행을 자유화하였다. 정치적 박해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싫어서 정치범을 서독에 넘기기도 하였다.

냉전이 해체된 지 30년이 지난 늦은 시점이지만 한반도는 전 세계 마지막 냉전 구조 해체를 위한 대장정에 들어섰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이번엔 반드시 좌절시켜야 한다.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들어 국제 사회의 규범을 따르게 하고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분단의 고통을 치유하며 남북 간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자유 왕래와 상호의존성 확대를 통해 공동체적 통일을 추진해 나가면 점진적 통일 과정이 완성될 수 있다.

지난해 남북 대화를 비롯하여 새해 벽두부터 북미 대화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 및 일반 국민은 이를 지지하고 성원해야 한다. 앞으로 있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대화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존재할 것인가?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신부

면도기를 구입하려 한 대형 마트에 갔다. 나는 자연스럽게 카트를 밀고 매장에 들어섰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몸은 이미 좋아하는 생활용품 진열대를 서성이고 있었다. 좋아하는 물건들을 보며 정신이 속 빠져버린 나는 생활용품 판매대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면도기만 사면 되는데' 하며 정신을 차리고 면도기와 몇몇 물건들을 고른 후 계산대를 향했다. 그런데 계산대에 지나는 물건들을 바라보며 문득 나는 '저 물건들이 지금 필요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계산 후 집으로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내 자신이 한심했다. 왜냐하면 전에 샀던 똑같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물건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

지 않았지만, 웬지 그것을 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순간 내 마음은 든든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어땠을까? 나는 소유하지 못한 아쉬움에 공허함만이 남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산업 사회를 거쳐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풍요로움을 경험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값진 노동을 통해 재화를 얻고, 그 재화는 소비라는 이름으로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한다. 그러나 제어할 수 없는 탐욕이 증가됨을 부각할 수 없다. 우리는 무분별한 소비, 많은 것을 소유하고 독점하는 것만이 자신을 존재하게 한다고 망각한다. 무분별한 소비를 통한 소유는 자신도 모르게 천박한 자본주의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린다. 우리가 '사람 나고 돈 낚지 돈 나고 사람 낚나'라는 말을 번번히 쓰는 것을 보면, 얼마나 소유하려는 욕구가 큰지를 알 수 있다. 살기 위해 소유하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 사회는 소유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정신분석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러한 현실을 이미 예견하였다. 그는 자신의 저서 '소유나 존재냐'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논한다. "소비는 소유의 한 형태이며, 그것도 아마 오늘날의 풍요한 산업 사회의 가장 중요한 형태일 것이다. 소비는 다의적(多義的)인 특질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우선 불안을 제거해준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 더 많이 소비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이전의 소비가 곧 그 욕구 충족적 성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존재한다=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및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그래서 에리히 프롬은 자신의 저서에서 인간 생존의 두 가지 양식을 소개한다. 그 두 가지 양식은 '소유'와 '존재' 양식이다. '소유 양식'은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의 소유에 전념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존재 양식'은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기쁨을 확신하는 양식이다. 다시 말해 '소유 양식'

은 물질 중심으로 죽은 관계로 보았는데, 이 양식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의 차별과 외주화의 산업 재해이다. 그리고 '존재 양식'은 생명의 철학적이고 삶의 긍정적 부분이라며, 예수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예로 든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내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루카 9.24-25), "인간 발달의 최고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유를 갈망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며 인간 관계를 죽이는 관계로 내몰고 있는 '소유'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생명의 관계인 '존재'의 삶을 것인가?'의 사이에서 선택을 고심해야 한다. 인간을 추악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소유 양식'이다. 하지만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존재 양식'이다. 그러므로 어떤 삶에 대한 선택권과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기고

똑똑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안전 UP, 행복 UP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

세계는 지금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면서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과 인공 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 자동차(UA, Unmanned Automation)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이의 공간을 연결하고 자동화하여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무인 자동차, 사물 인터넷과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자동차와 도로에 접목되면서 자율 주행(AV, Automated Vehicle)과 협력 주행(CV, Connected Vehicle)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인프라)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개별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도로에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사전 대처할 수 있는 자율 협력 주행(CAV, Cooperative Automated Vehicle)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과 통신 기술이 결합하여 교통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교통수단의 수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교통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광의의 개념에서 '지능형 교통 체계'(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라고 부르는데, 과거 ITS는 교통수단과 시설이 분리된 상태에서 도로, 차량, 화물 등 교통의 구성 요소에 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단순히 교통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의 지능형 교통 체계는 차세대 ITS(C-ITS)라고 불리우며, 도로, 차량 등의 교통 인프라와 ICT가 융복합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앞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 또는 사고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뒤따라 오는 차량에게 신속하게 사고 정보를 전달해 연쇄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결빙 구간 등 사고 위험 구간에서는 위치 정보를 통해 자동차가 스스로 속도를 제어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까지 인식하여 안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C-ITS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는 주파수, 표준화, 법제화 등 실용화 직전 단계까지 와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4년 '차세대 ITS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6년까지 대전·세종 구간에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가 전략 사업이기도 하다.

미래의 교통 환경은 궁극적으로 도로 인프라와 자동차가 접목되는 자율 협력 주행 기술과 차량 센서와 도로 인프라로부터 제공받는 빅 데이터 수집, 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인공 지능 기반의 첨단 교통 운영 관리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광주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 고도화와 실증 사업을 연계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9년 지자체 지능형 교통 체계 국고 보조 사업'에 응모하여 최근 울산시와 함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총 250억 원이 투자되는 이번 '지능형 교통 체계 고도화' 사업은 국토교통부

가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100억 원은 광주시가 부담한다. 올해 상반기중 실시 계획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 72% 수준인 교통 신호 제어 온라인율을 100% 까지 높이고, 도로나 교차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쿨 존과 실버 존에 대한 교통 안전 서비스와 고령자 안전 운전 지원, 스마트폰을 통한 보행자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행 관리와 연계된 대중교통 서비스도 제공되며, 인공 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을 통한 다양한 교통 안전 및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이다.

과거 공장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최첨단 정보 통신 기술과 융합되면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변화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로 교통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

社說

광주·전남 유학생이 주도한 2·8 독립 선언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도심에서 선포된 조선 유학생들의 독립 선언은 세계사에서 찾기 힘든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식민지 청년들이 침략국의 수도에서 독립 선언을 한다는 상상도 못할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100년 전 오늘, 도쿄엔 그날 아침부터 눈발이 날랐다. 오후 들어서는 폭설로 바뀐다는 데 36년 만의 대설이었다. 조선 학생 600여 명은 YMCA 앞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 자결 주의에 따라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8 독립 선언이 일제 강점기 조선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된 3·1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주역 중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차에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처음 이끌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광주일보 7일 자) 1919년 1월 6일 조선 유학생들이 운병회를 열고 독립운동을 결의했는데 광주 출신 정광호와 나주 출신 김현준이 2·8 독

립 선언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정광호는 특히 독립선언서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서울에서 최남선을 만난 뒤 2·8 도쿄 선언과 때를 같이 해 국내에서도 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밖에 최원순·이이규 등은 한국을 수시로 오가며 독립에 대한 강연을 하는 등 광주·전남 출신 유학생들이 국내외에서 2·8 독립 선언과 3·1운동을 촉발하는 데 기여했다.

오늘로 2·8 독립 선언 100주년을 맞는다. 3·1운동 100주년에 밀려 조명을 덜 받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지역 출신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주도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쿄와 서울에서 2·8 독립 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벌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지역에서도 2·8 독립 선언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기적인 기념식도 중요하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역 출신 인사들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기관 통합 어수선한 문화전당 내실 다져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두 축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과 준정부 기관인 아시아 문화원을 통합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부가 이원화된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 진단 용역을 다음 달 실시, 결과에 따라 기관 통합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감독기관인 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 업무를 위탁받은 아시아 문화원이 별도 운영돼 효율적 운영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특별법' 조항이 내년 4월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조직의 물리적 통합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우선 문화전당이 개관 4년째를 맞이했는데도 컨트롤 타워인 문

화전당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정부 조직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4년째 직무대리 체제다. 정부가 약속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시대'도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목소리 또한 여전하다. 문화전당 건립을 포함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애초 사업비가 5조2912억 원으로 잡혔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은 1조2480억 원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문화부와 문화전당 측이 자칫 기관 통합이 매몰돼 문화전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광주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으로 마무리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부와 문화전당 측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초심으로 돌아가 문화전당 활성화와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조선청년독립단은 우리 이전만 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기성하기를 선언하노라. … 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조선이요 한 번도 동일한 국가를 잃고 이민족의 실질적 지배를 받은 일이 없다." 100년 전 일제의 심장부 도쿄에서 발표된 2·8 독립 선언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유학생들은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에 놀라고 또한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민족의식만큼은 강했다. 비록 나라를 잃은 신세지만 부지런히

사했고 최팔용은 수감 시 상한 몸을 추스르지 못해 출소 후 세상을 떠났다.

일부는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 정부 수립 때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출신 정광호는 독립 선언서를 가져와 국내서 호응하는 거사를 준비했고, 나주 출신 김현준은 자금 조달을 맡았다. 도쿄 유학생들의 선도적인 독립 선언과 집회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을 격동시켰고 이는 20일 뒤 한반도 전역을 뒤흔든 3·1 만세 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2·8 독립 선언

일제 강점 36년의 역배워서 조선을 각성시키고 일으켜 세워 국민을 되찾자는 열망이 컸다. 유학생 학우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학자광'을 발행했으며 각종 행사와 운병 대회 등을 통해 민족의식을 드높이기도 했다.

사는 치열한 항일 투쟁의 역사가.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줄기차게 싸웠다. 가까이 국경을 넘었고 죽을까지 감수하며 총을 들었으며 폭탄을 던졌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 자금, 이른바 군자금을 모아 전달했다. 그들이 있어 일제 강점기는 치욕의 시간에 그치지 않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수 있었다.

오늘은 2·8 독립 선언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학 중에도 시대의 요구에 고개 돌리지 않고 묵묵히 응답했던 그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하자.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건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